노-정 '强 대 强'… 일촉즉발 공직사회

정부 "공무원노조 민노총과 연대 투쟁 엄단"

통합노조 "노조원 징계 땐 대정부 투쟁" 반발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한 공무원노조는 23일 정부가 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가입이 공무원노조법에 허용된 적법한 것임에도 부정적인 뉘앙스의 담화를 발표해 전체 공무원노조 탈법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조합원 징계가 이뤄진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해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부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치투쟁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대해 남영현 법원 노조 호남 본부장은 "민노총 가입은 노조의 적법한 행위로 정부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론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으름장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나성군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전남본부장도 "정부가 노조원들이 마치 법범행위를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정작 어떤 규정과 법규를 위반했는 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 노조가 적법한 행위를 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가 일제히 반발한 데는 정부의 대국민 담화가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 깔렸다. 민주노총 가입이 정치행위나 불법시위 참여로 이어져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예단성 발언을 한 것은 시작부터 통합 노조를 범법단체로 만들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게 노조의 시각이다.

23일 서울 영등포동 5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앞에서 시민단체 활빈단 관계자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왼쪽〉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내 법원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통합준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강경대응 기류와 상관없이 현재 추진하는 통합 일정과 민노총 가입 절차를 강행하되 노조에 대한 조치가 나온다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노조 강동만 사무처장은 "정부의 흔들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계획된 일정에 맞춰 조직의 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중앙부처가 이미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정부가 이들에 징계를 고수한다면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투쟁은 물론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며 정부와 정면 충돌도 불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법원노조 강동만 사무처장은 "정부의 흔들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계획된 일정에 맞춰 조직의 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연합뉴스

"김대중 前 대통령은 트랜스 포머"

정치·사회적 변혁 등 이뤄내 뉴스위크誌 만델라 등 소개

23일(미국 현지시간) 개막된 제 64회 유엔 총회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 인터넷판은 유엔 총회 개막을 기해 임기 중 조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혁을 이뤄낸 이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 즉 '트랜스포머'들을 소개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지난달 18일 서거한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끊임없는 암살 위협에도 불구, 평생 조국의 민주화에 헌신한 끝에 1997년 대선에서 당선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한국 정치사상 첫 '여·야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1998년 2월 취임한 김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국을 아시아 금융위기의 나락에서 구출해 내는 데 성공했으며,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한 간 관계 개선에도 기여했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 '아시아의 넬슨 만델라'로 불렸던 김 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2003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남아프리카공화국을 극심한 인종차별주의로부터 해방시킨 '구원자'. 1944년 아프리카민족회의 청년연맹을 창설하며 본격적으로 '아파르트헤이트(인종격리정책)' 폐지 운동을 시작한 만델라 전 대통령은 인권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199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덩샤오핑 전 중국 국가주석=중국을 세계 열강에 올려놓은 지도자. '흑묘백묘론'으로 알려진 실용주의 노선을 통해 중국에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제대국 중국'의 발판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 31건 방치

강제이행금 징수율, 광주 1% 최저

광주·전남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이 모두 31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부과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광주의 경우 1.1%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이 국토 해양부로부터 23일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6월까지 그린벨트 내 주택·창고·축사·공장 등 불법 건축 행위 6천96건이 원상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 건축물은 정부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들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미조치가 3천6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 2천34건, 인천 200건, 대구 81건, 서울 55건, 전남 25건, 울산 22건, 충남 19건, 경북 10건, 경남 7건, 광주 및 대전 각각 6건, 충북 5건 순이었다.

또한,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006년~2009년 6월까지 6천444건에 걸쳐 401억 5천546만원이 부과됐으나 징수된 금액은 3천260건에 141억 9천244만원으로 징수율은 35.3%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충남(징수율 0%)을 제외하고, 광주가 8억 1천54만원(17건) 중 1.1%에 달하는 9천여만원(13건)만 징수돼 징수율(금액 기준)이 가장 낮았다. 전남도는 2천42만5천원 중 735만9천 징수해 징수율은 36.0%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전남도 행복마을 선정, 경쟁제로

내년부터 주민 주도 '공모제' 도입

전남도의 역점시책은 행복마을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에 경쟁원리가 도입된다.

전남도는 민선 4기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행복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을 오는 2010년부터 주민주도의 상향식 공모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한옥 신축 여부만으로 행복마을을 선정해왔으나, 결과적으로 한옥만 신축되면 행복마을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인식돼 이를 개선하고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복마을 선정방식을 변경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2차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대상지 선정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시·군에서 주민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 16일까지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2월 초순께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현장과 시각

광주 문화수도다운 건축물 없나

윤현석 사회1부 기자

무등산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광주의 모습은 온통 고층 아파트 천지다. 최근 20년 새 광주의 외곽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이 계속되면서 고층 아파트들이 성벽처럼 도심을 둘러싸게 됐다.

또 구도심인 동구 계림동 등 일부 단독주택지역에서도 재개발이 속속 추진되면서 도심 속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섰거나 앞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그야말로 '아파트 도시'라는 느낌이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경관이나 도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랜 역사문화자원이나 '동네'라는 고유의 커뮤니티를 파괴시켜 도시를 삭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이해와 배려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아파트 남발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주민들은 고층아파트 일변도의 재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나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도 사업 차원에서 아파트 공급을 계속할 것이다. 동시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미분양은 증가하고, 도시 속 고층 아파트로 인한 범죄나 일조권 피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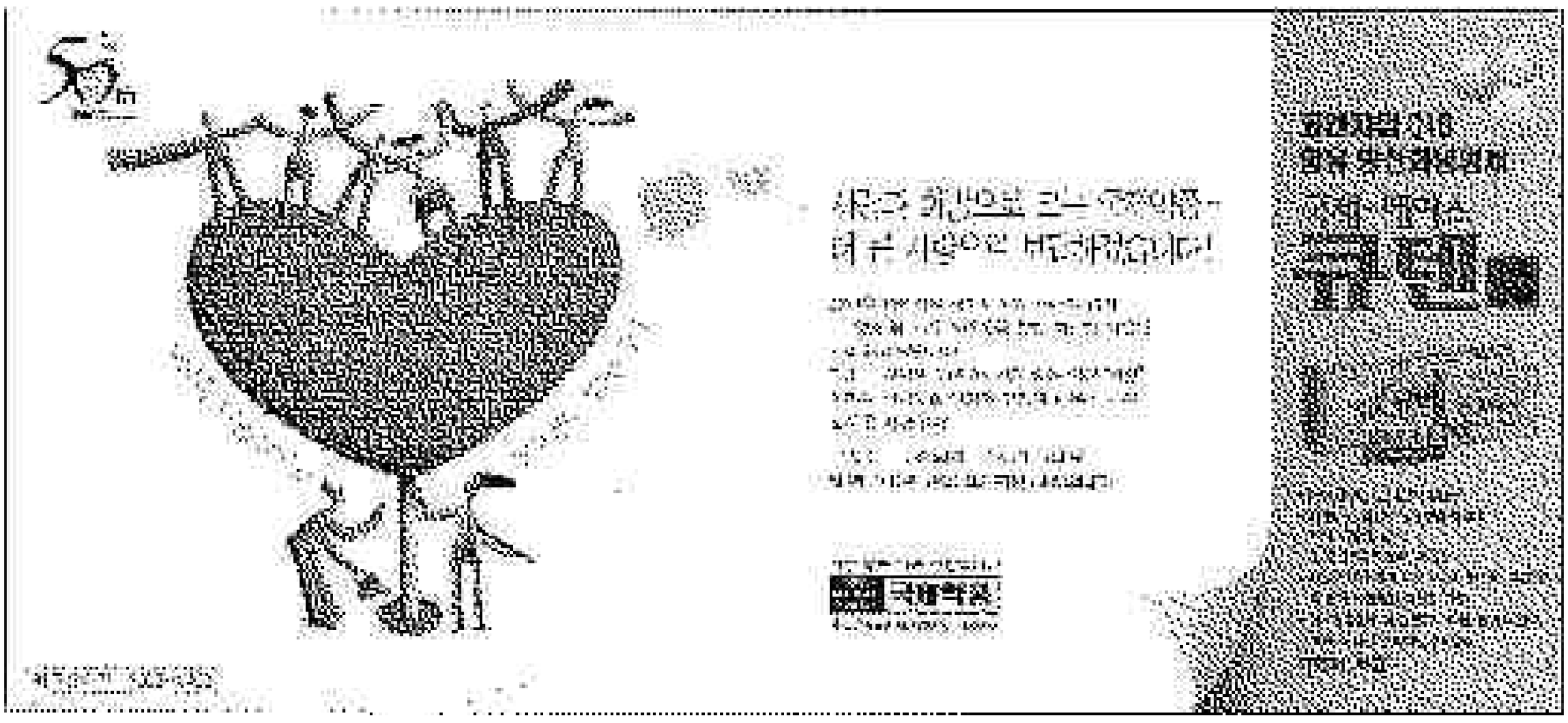
사실 고층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도권에나 들어맞는 정책이다. 수요는 넘쳐나지만 주택이 부족한 경우 밀도를 높여 개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그러나 전국 모든 도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심을 재개발하는 데 공공재원이 아닌 민간자본이 동원되고, 그 민간자본은 수익성을 증폭시키기 위해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건물을 높이며, 원래 거주했던 주민들은 땅만 팔고 사라지고 외지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식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아파트 범람 시대에는 각 지역의 사정에 맞춰 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지역 주택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 지역에 필요한 만큼 주택이 공급되고, 지역의 이미지에 타당한 특징 있는 주택 디자인을 창안해 엇비슷한 모습의 도시가 아닌 각 도시마다 다양한 주택들이 들어서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구도심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기존의 소방도로를 내는 수준의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탈피해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 현재의 '동네'가 유지되면서 주거환경도 향상시키는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

최근 광주시는 광주를 창조적인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도시계획이나 건축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창조적인 시도를 통해 광주만의 멋을 가진 주택이나 건축물이 도시 곳곳에 들어서기를 기대한다.

/chadol@kwangju.co.kr